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올리나?
-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현실과 과제
[발제자] 황원규 강릉원주대학교 명예교수
[일 시] 2022년 9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Google Meet 온라인 세미나



☒ 문자 후원
#7079-4545

제406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역사상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다. 1950년대 당시 정부 예산의 1/2 이상이 해외 원조였다. 주요 국가기간시설도 해외 원조와 차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이며 2021년 현재 연간 28.5억불로 125개국을 지원하고 있는 공여국이 되었다.

- 원조의 성과를 높이려면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관행을 따라야한다. 수원국과의 접촉창구는 1선 집행기관으로 KOICA를 앞세우고 정책기관으로서 외교부가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교부-KOICA 중심의 단일화로 기획 및 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무총리실의 조정 기능을 폐지하여 외교부의 정책기관 기능을 강화해야한다. 기타 중앙부처 및 전문기관은 제2선 집행기관으로 참여하고 특히 유상에서 무상 원조로의 이행을 가속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현실

가. 한국국제협력개발의 역사

- ◆ 우리나라 정부예산중 특이한 예산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예산이 아닌 타국민을 위한 예산이 있다. 바로 국제개발협력예산이다. 우리 예산 중 한계효용이 가장 큰 예산이 국제개발협력이라고 생각한다. 세금이 아니라 성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 ◆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역사상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다. 1950년대 당시 정부 예산의 1/2 이상이 해외 원조였다. 주요 국가기간시설도 해외 원조와 차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국이며 2021년 현재 연간 28.5억불로 125개국을 지원하고 있는 공여국이 되었다.

나. 한국국제개발협력의 장점

- ◆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유일한 국가로 공여국에 희망을 전달하며 동병상련의 정서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해외원조가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 피지배권을 위해 제공하는 일종의 속죄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으나 한국은 식민지배의 경험이 없다. 제국주의적 동기가 없고 속죄의 수단이 아닌 순수한 원조라는 것이다. 또한 신흥공여국으로서 새로운 규범 창출의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원조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문제점

- ◆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조의 방향성이다. 현재는 원조의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진다. 원조의 양은 OECD 30개국 중 15위이고, 원조의 질은 조사대상 40개국 중 24위를 차지하며 이는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바닥이다.

- ◆ 구조와 운영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원조는 유상원조 비율이 높다. 2020년 기준 무상 대 유상 비율은 66대 34였다. 주요 DAC국가들은 거의 100% 무상원조를 하는 것에 비해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사실 원조 자체를 순수한 개발협력이나 자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수출을 위한 보조사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다. ‘구속성 원조’라 함은 원조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자 등을 한국에서 가져다 사용하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말한다. 기업협력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비율이 2018년 기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국가 평균 16.1%인것에 비해 한국은 55.4%나 된다. 한국은 개발협력을 국익실현의 도구로 보고 직접적이고 단기적이며 가시적인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 이제는 국제개발협력을 간접적, 우회적, 장기적인 국익실현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 원조 액수가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원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정치적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 정권에 따라 원조의 형태가 달라지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제원조 적폐청산을 표방했지만 오히려 파벌적 운영이 심해지기도 했다. 또한 KOICA와 같은 원조 집행기관들의 권위의식으로 갑질문화가 고착되었고 파견 인원은 많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적지 않다.
- ◆ 개발협력에 부처이기주의가 난무한다. 우리나라의 원조는 유상원조부터 시작했다. 이것이 잘못 끼워진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 1987년 경제기획원 주도하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창립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유상원조 기관의 주도하에 원조가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원조 비율을 보면 기획재정부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가 3.27조원으로 47.7%를 차지하고 외교부와 KOICA가 36.3%, 42개 기타 부처 및 기관이 16%를 차지한다. 유상원조에서 무상원조로 많은 이행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유상원조 기관의 주도하에 원조가 이뤄지고 있다.
- ◆ 원조행정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국가 최고위급 정부 부처의 원조 참여 및 주도권을 들 수 있다. 원조 총괄책임이 국무총리실이며 주도적 시행기관이 기획재정부이다. 우리나라 원조는 44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직접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분절화 구조다.

◆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 ◆ 대한민국 원조의 지향점을 MBA(More and Better Aid)로 정해봤다. 이를 실현하려면 원조 추진체계를 재정비해야한다. 전세계적으로 권유되고 있는 관행을 따라야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국무총리실이 원조를 담당하고 기획재정부가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수원국과의 접촉창구는 1선 집행기관으로

KOICA를 앞세우고 정책기관으로서 외교부가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교부-KOICA 중심의 단일화로 기획 및 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국무총리실의 조정 기능을 폐지하여 외교부의 정책기관 기능을 키우고 기타 중앙부처 및 전문기관은 제2선 집행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유상에서 무상 원조로의 이행을 가속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가장 빈곤한 국가에서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정책수단은 국제개발협력이다. 내부의 모순을 척결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다. 먼저 ODA(공적개발원조) 집행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많은 정부부처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구조를 변경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집권 초기에 이를 고쳐야한다. 5월 10일에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했다. 이후 마침에서도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했다. 세계시민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된다. 윤석열 정부의 약속 이행을 기대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